

연식열 정권
노동조합
어떻게?
어떻게?

노동조합비 회계공시와 세액공제

Q & A



전국금속노동조합



Q 노동조합비 회계공시와 세액공제가 무엇이길래 금속노조에서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다루는거죠?



A.

노조는 노조법(26조)에 따라 매년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조합원에게 공표해야 해요.

그런데 지난해 9월 정부가 노조법 시행령(11조의 8~9)을 신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조합원에게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되 노동부가 만든 공시시스템으로 강제했어요.

정부는 같은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1천인 이상의 단위노조 등은 노동부가 만든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으로 공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도록 한거죠.

원래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금에 노조 조합비(15%)가 포함돼 있었는데, 1천인 이상 조직에 대해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이용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국회를 우회해 시행령 개정으로 만든 것입니다.

정부의 노림수!

상급 연맹이나 노조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하부 조직이 회계공시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제도 개악은 정부가 했지만, 조합비 세액공제 미적용 불이익의 비판을 상급 연맹이나 산별노조가 떠안게 설계한거죠!



회계공시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

총연맹	공시	거부	공시
금속노조	공시	공시	거부
단위노조	공시	공시	공시
공제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회계공시 그냥 하고, 조합비 계속 공제 받는게 그럼 좋은 것 아닌가요?

구분	전세(가)	공제(가)
건수	739	675

대형 노조 총수입 지난해 1조원 육박...금속노조 595억원으로 최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의 작년 총수입이 8424억원으로 집계됐다. 노조당 평균 12억5000만원에 달했다...



대형노조 한해 수입 8400억...임금격차 이어 노조비도 '양극화'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 쏠린 것처럼 노조들의 수입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회계 공시율 91%, 인건비 1위 현대차노조

올해 처음 시행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회계공시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대상 노조 중 91%가 공...



양대 노총 노조 94%가 회계 공시 참여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의 91%가 올해 처음 시행된 노조 회계공시 제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올해 10~1...

국민일보 사회>노동_복지 | 사회>미디어 2023/12/07 박상은

양대노총 '수백억원' 수입...조합원 수 적은 민주노총, 인건비 2배 더 썼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매일경제

사회>노동_복지 | 경제>경제

파업 '줄고' 분규지속일수도 역대 '최저'... "일관된 노사법치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머니투데이

'세액공제' 압박 통했다...노조 10곳 중 9곳 '회계공시' 참여

올해 처음 시행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10곳 중 9곳이 회계를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



서울신문

사회>노동_복지 | 사회>미디어

2023/11/30 최재현



A

작년 회계공시 이후 언론이 일제히 쏟아내는 말들입니다. 현재 공개하도록 한 항목만 가지고도 벌써 인건비 과다 지출 등의 말을 쏟아내고 있죠. 또 현재는 교섭,쟁의사업비를 묶어놨지만 언젠가 노동부 마음대로 항목을 분리하고, 쟁의사업비만 쓴다는 식으로 노조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초부터 '노동개혁' 운운하며 노동유연화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막고 있는 노동조합이 눈엣가시이자, 나라를 망치는 주범으로 몰며 '카르텔'운운 합니다.

우리가 수십년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고용유지 등을 만들어온 걸 하루 아침에 다 내놓고, 노동조합의 힘을 빼놓고자 하는게 정권의 목표입니다.

**노조 도덕성
흠집내기**

**상대적박탈감
국민과 갈라치기**

**노동개혁 걸림돌
노조무력화**

Q. 그래도 세액공제 못 받으면 조합원들에게 너무 손해 아닌가요?

A.

연말정산 간단 이해



- ①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 ② 연금공제(국민연금+공적연금)
- ③ 특별소득공제

- ① 정치자금기부금
- ② 고향사랑기부금
- ③ 특례기부금(적십자,사랑의열매)
- ④ 우리사주기부금
- ⑤ 일반기부금(조합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보다 중요한 부분은 소득공제예요. 애초에 결정되는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게 세금을 줄이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과세표준액 5,000만원 미만이나 아니냐의 차이 세액공제는 마지막에 결정된 세금 중에서 일부를 줄여주는 겁니다. 기부금은 다른 특별 세액공제(보험,의료,교육) 이후에 저 순서대로 기부금을 차감한 후에도 남아할 세금이 남아있다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년 금액의 15%)

※ 같은 급여라도 미성년 자녀 여부, 지출 성향 등 개인적 요건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요.

400만원한도 상환액의 40%

조합비를 1년 150만원 낸다고 할때 돌려받을 수도 있는 금액이 225,000원입니다. 작년 금속노조의 평균 임금인상금액은 1,512,036원입니다. 노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훨씬 큼니다.

100만원까지 12%
진보정당 당비 12만원 조합비 150만원 기준 년 금액의 15%

	연봉4000만	7,000만원	8,000만원
존속 공제		1,500,000	0
비속 공제		3,000,000	0
국민연금공제	1,500,000	3,132,000	3,132,000
건강고용보험	1,560,000	3,413,160	4,121,520
주택자금공제		2,400,000	
기부금이월			
신용카드	1,500,000	1,125,000	600,000
과세표준액	21,250,000	44,093,000	64,150,000
산출세액	2,152,500	5,353,950	9,636,000
근로세액공제	684,000	660,000	500,000
특별-보장보험	60,000	120,000	60,000
특별-의료비			
특별 자녀공제		300,000	
정치기부금		93,909	93,909
일반기부금	225,000	225,000	225,000
세액공제계계	969,000	1,398,909	818,909
결정세액	1,183,500	3,955,041	8,817,091



그래도 뭔가 세액공제를 못받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잖아요?



A. 네 그래서 조합원동지들의 결의가 필요해요!

두-동탁

개약된 법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미 국회에 개정 법안도 발의되어 있지만, 현 정권에서 노동자들이 싸우지 않으면 또다시 거부권으로 막아설 게 뻔해요. 총선 이후 우리 노동자들의 힘있는 투쟁으로 법을 바꿔야 해요!

정권이 뺏어간 몫만큼 되돌려 받는 힘있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노동조합 없이는 불가능하죠. 당장 내년에 적용될 연말정산 관련 제도는 올해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바꿔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개별 협약투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시행령을 되돌리고, 오히려 조합비보다 100% 세금으로 쓰고 있는 대통령 업무추진비, 검찰 특별활동비 등 깡깡이로 정권의 입맛대로 쓰이는 세금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노동조합을 시민과 갈라치기 하려는 정권에 맞서야 해요!

위법심사, 법개정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노조무력화에 맞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어떤 것도 대안이 되지 않아요. 노동조합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고용유지 등 모든 것이 백지로 돌아간다는 것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함께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A. **금속노동자의 기세를 보여주세요!** 두-통탁

시행규칙 개정 산하조직 실태 제출 의무

정부의 지배개입 강화

회계공시 의무 부과

노조 불법집단 매도, 도덕성 훼손

근로시간면제한도 시정지시

노사관계 악화 유도, 지도부-조합원 이간질

이중구조 해소 -노동시간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고무줄 노동, 해고유연화

**노조 무력화
자본요구 전면
실현**

2024 결연한 태세를 구축하고 투쟁에 나서자!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노조 탄압을 확대·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를 눈앞의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자들로 이해함.

세액공제 혜택 따위에 흔들려 민주노조 자주성과 자존심을 버릴 금속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

자본 입장에서는
노조 전임자 활동을 축소하는
것이 노사관계에서 힘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핵심 조건

VS

노조 입장에서는
전임자 활동이 온전히 보장돼야
대등한 노사관계를 형성해 조합
원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음.



전국금속노동조합